

Issue Comment

- ✓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폐기 결정
- ✓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 본격화 전망
- ✓ 망중립성 폐기(완화) 시, 통신사에는 긍정적 영향 전망

통신서비스: 미국, 망중립성 정책 폐기 결정

미국, 망중립성 정책 폐기 결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 버락 오바마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기로 확정함. FCC 위원 5명 중 3명(공화당 추천 인사)이 망중립성 폐기에 찬성한 것으로 지난 달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이 나온 이후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부문임. 망중립성 폐기가 확정됨으로 인해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는 통신법상 타이틀 2 대신 타이틀 1로 변경됨. 이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되게 되는 것을 의미함. 공공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인터넷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의 차별이 금지됨. 하지만 정보서비스로 분류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해져 특정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됨. 즉, 망중립성 폐기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과금이 가능해 짐.

미국의 정책 변화로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

미국이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현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정책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망중립성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기한다고 해도 당장 우리나라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 하지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폐기가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 망중립성 정책 폐기(완화) 시, 국내 통신사에 긍정적 영향

만약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완화)된다면, 국내 통신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특히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5G에 대해 정부의 조기 상용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함. 트래픽 유발에 따른 과금은 B2B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계 통신비와의 관련성도 낮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